

# 민주화 상징 '5·18' 상표등록한다

### 기념재단, 법적 권리 확보 위해 특허청에 출원

### 계간지 '주먹밥'도...5·18 오용·상품화 방지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한 획을 긋는 상징적 숫자다. 주먹밥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정신을 담은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5·18 기념재단이 발행하는 계간지 명칭을 '주먹밥(사진)'으로 정한 것도 이같은 시민 참여 의지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5·18 기념재단은 더 나아가 계간지 '주먹밥'과 5·18 광주민중항쟁을 상징하는 숫자 '5·18'에 대한 법적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5·18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5·18을 상품화하는 등 잘못 사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적 권리 확보에

나섰다는게 기념재단측 설명이다. 이미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법적 권리 확보에 나선 것이다.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법률사무소 측은 "5·18을 비하하는가 하면, 왜곡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혹시 모를 오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기념재단이 발행하는 '주먹밥'은 '인권 도시', '오월 광주'의 정신과 끝나지 않은 오월 이야기, 도시 공동체와 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담고 있다.

기념재단이 신청한 2개의 상표(서비스표)가 등록이 될 경우, 기념재단 측은 지정 상품에 대해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을 갖게 된다.



특히 출원이 이뤄지면 기념재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먹밥'이라는 상표(이름)로 계간지(서적 등)를 발행할 수 없고, 5·18 민중항쟁과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이 하는 사업 등에서 마구잡이로 '5·18'이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념재단 측은 또 제 3자가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일종의 재산권 성격이 포함돼 있는 셈이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법률사무소 측에서 검토한 결과, 계간지 '주먹밥'은 물론 재단 정관에 기념사업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숫자 '5·18'에 대한 서비스표(상표)에 대한 권리 확보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상표 등록 이후 2개 상표가 마구잡이로 쓰이지 않도록 5월 단체들과 함께 고유 상표를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기념 사업 등 용역의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 표지임에 반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10년씩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전남도 '5·18 지원 조례' 만드나

### 도의회, 기념사업 등 3건 제정 검토

### 등이다.

5·18 기념재단이 전남도의회에 '5·18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시 의회가 제정·발효 중인 3가지의 '5·18 지원 조례'를 전남도의회에 보내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념재단측이 제공한 3가지 조례는 '5·18 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민주화운동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조례

등이다. 기념재단 측은 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은 시·도민이 함께 참여했는데 광주와 달리, 전남에서는 '5·18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만큼 도의회에 관심을 촉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게 기념재단측 설명이다.

강성휘 전남도위원은 이와관련,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 5·18 기념재단 측으로부터 '5·18 지원 조례' 등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의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균열' 평화맨션 재건축 불가피

### 정밀안전진단서 A·B동 모두 'E등급'

광주시 북구 중흥동 평화 맨션에 대한 재건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광주시 북구청에 따르면 한국구조안전기술원은 지난 7월 29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통해 사고가 난 평화맨션 B동을

뿐만 아니라 A동 역시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하는 'E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5월 자체 점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대상관리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인 A~E 등급 중 B 등급을 받은 바 있다. 2개월 전 이뤄진 점검 결과와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애초 점검이 꼼꼼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원은 "건물이 전반적으로 중대결함인 상태"라며 "두 동 모두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고 콘크리트 타설 불량에 따른 철근 노출, 철근을 감싸는 콘크리트 양 부족과 부식, 누수로 인한 노후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기동 균열이 발생한 B동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평균 12.78MPa(메가파스칼)로, 설계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18MPa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한편, 지난달 24일 평화맨션 B동 기동 2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60여 가구 주민들이 전적집과 인근 우산초등학교 등에 한 달 이상 대피생활을 해왔으며 이번 주부터 학교가 개학하면서 LH와 도시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또 건물이 지표면으로 218mm 기울어져 있으며 철근을 감싸는 콘크리트 양 부족 때문에 철근이 틀어지고 탄산화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원은 "B동의 경우 기동파손으로 인해 이미 과도한 변형이 일어났고 지나치게 낮은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부식 등을 보강할 만한 방안을 찾기 곤란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동 역시 근본적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건축을 위한 준비기간인 약 2년 동안 임시 거주가 불가피하다면 기동 주변 책서포드 설치 등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민들을 집을 팔고 나가거나 그대로 사는 것 중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해줄기 바라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4일 평화맨션 B동 기동 2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60여 가구 주민들이 전적집과 인근 우산초등학교 등에 한 달 이상 대피생활을 해왔으며 이번 주부터 학교가 개학하면서 LH와 도시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이중행기자 golee@



법원서 열린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가 28일 광주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대학교 음악학과 M.E.M양상블이 오카리나 7중주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고법도 "복구청, 할인마트 건축허가 불허 위협"

# '생존권 위협' 영세상인 불안감 커져

지치단체가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워 할인 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지역 영세상인들의 경우 복구 일대에만 대형 유통업체가 3개의 할인점 입점을 추진중인데다, 대형 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주변 상권을 흡수하면서 영세상인들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게 돼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게 됐다.

광주고법 제 1행정부(부장판사 박병철)는 28일 남양주태산산업(주)이 광주시 북구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복구가 불허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복구가 불허 사유로 든 심각한 교통장애 및 거주환경 악영향, 생활권 침해와 관련, "대형마트 운영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위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구가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시 북구는 지난해 3월 운암동 롯데슈퍼 부지에 지하 3층·지상 5층(연면적 2만8000㎡) 규모의 마트를 짓겠다고 남양주태산산업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40대 또 감시장치 파손



○성폭력 범죄로 착용하게 된 전자발찌와 신호를 주고 받는 '전자위치 추적 장치'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감시 장치를 파손했다가 철장신세.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등 전과 11범인 이모(41)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20분경 광주시 서구 자신

의 집에 부착된 위치추적용 '재택 감시장치'를 떼어내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는 것. ○경찰은 이씨가 착용한 전자발찌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위치를 관제센터에 송신하는 재택감시 장치가 파손된 것을 감지한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 집안에 있던 이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대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정원**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중음  
매매가 5950만원
- **임야 36026㎡**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차선 포장도로 접  
전면 86m 접  
매매가 2억1800만원
- **다가구 주택 부지**  
북구 오치동(도로 접)  
대지 928㎡(280평)  
매매가 4억8000만원

★급매물 접수합니다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20층, 최상층, 전망중음  
★ 사무실 적합, 전체 율수리  
시세/분양가-4억  
매매-2억7천5백만원
- 53평-13층, 코너, 전망중음  
전체 율수리, 주거겸/사무실 겸용  
★ 시세/분양가-2억  
매매-1억5천5백만원
- 29평-11층, 2세대, 사무실 적합  
하천방향, 즉시입주 가능  
매매-6500만원  
-일사불 파격 매매

**회사 사정상 매매**  
문의, 010-6836-8500

**아파트형 콘도/별장/펜션 분양**  
문의, 010-6832-8900

-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 **아파트 개념**  
전기, 수도, 가스 개별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 **산속의 궁전**  
화계장터, 쌍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 2층, 28평, 56평 각각 1세대
- ★ **총 55세대 중 잔여세대**
- ★ 28평 - 9000만원(융자 2300만원 포함)  
56평 - 1억8천만원(융자 4600만원 포함)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대명리조트와 교환 가능**

**경매 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